

# 녹색에너지 상품 · 서비스 무역자유화, 새로운 통상 의제 부상

2012. 6. 26

철강전략연구센터  
김지선

posco  
포스코경영연구소

녹색에너지 상품·서비스 무역자유화, 새로운 통상 의제 부상

- 최근 녹색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녹색시장과 녹색상품의 무역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
  - 지난 15년간(1996-2010) 전세계 환경친화적 상품의 무역량 3배 증가
- 녹색산업 분야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들 간의 경쟁 (일명 ‘Green Race’)이 치열해지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도 강화 추세
  - 많은 국가들이 자국 녹색산업 육성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조금,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음
  - 최근 들어 환경보호라는 명분 아래 외국 기업의 자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적 조치의 도입 증가로 ‘녹색보호주의’ 확산에 대한 우려 증대
- 녹색기술 촉진, 녹색산업 육성,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한 녹색에너지 상품·서비스에 대한 무역자유화 논의 진행 중
  -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녹색에너지 기술 관련 상품·서비스 교역 자유화를 통해 약 13% 교역 증대 효과 기대
  - 녹색에너지 상품·서비스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술이전 촉진을 통한 기후변화 문제에 기여
  - 녹색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방지 및 무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 최소화
- WTO 등 다자간 협상부진에 따라 APEC, G20등 지역협력체 중심의 녹색에너지 상품·서비스 교역 자유화 논의 본격화
  - 2011년 11월 하와이에서 열린 제19차 APEC 정상회담에서 환경상품 목록 작성 및 해당 상품 관세 인하에 대한 협력 합의
  - 또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장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협정국간 자발적 무역자유화 이니셔티브인 ‘지속가능에너지무역이니셔티브(SETI)’ 논의가 세계유수 연구기관과 Vestas, GE 등 글로벌 기업의 참여로 진행 중에 있음
- 녹색에너지 상품·서비스 무역자유화 논의의 부상은 녹색에너지 사업 부문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게는 긍정적 신호
  - 녹색에너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는 해당 제품의 가격 하락과 교역 확산을 촉진시키고, 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기회 확대
  - 동 논의에는 해당 에너지 생산 설비에 사용되는 부품 및 관련 서비스 사업도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산업군의 직간접적인 수혜 기대
- 국내외 녹색에너지 상품·서비스 무역자유화 논의 동향 파악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정부 및 산업계의 전략적 대응 필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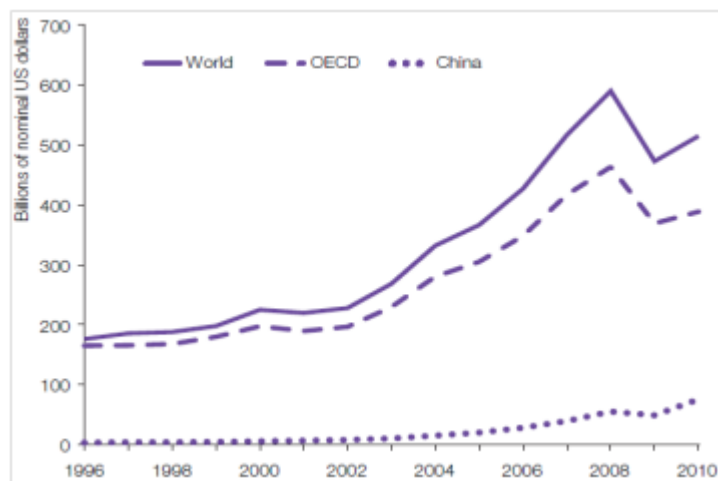
# Contents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I. 녹색산업의 성장과 녹색보호주의의 대두 .....      | 1 |
| II. 녹색에너지 상품·서비스 무역자유화 논의 동향 ..... | 3 |
| III. 종합 및 시사점 .....                | 5 |

## I. 녹색산업의 성장과 녹색보호주의의 대두

□ 최근 녹색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녹색시장과 녹색상품의 무역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

- 지난 15년간 (1996-2010) 전세계 환경친화적 상품에 대한 무역량은 3배 (명목가치) 증가
- 특히 중국 등의 신흥국들의 부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, 동 기간 비 OECD 회원국이 전세계 환경친화적 상품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%에서 24%로 급상승



<그림 1> 전세계 환경친화적 상품 무역 추이 (1996-2010)

<자료> OECD (2012)

### 환경친화적 상품 및 서비스(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) 란?

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환경친화적 상품 및 서비스의 정의 및 목록은 논의 중 이나 아직 존재하지 않음. 협의로는 대기, 수질, 토양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원, 폐기물 등을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(예: 하수정화설비에 사용되는 파이프, 밸브 등)를 말하며, 광의로는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에 비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덜 주는 상품과 서비스 청정에너지 관련 기술이 적용된 제품, 해당 에너지원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을 포함.

- 녹색산업 분야의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도 강화되는 추세
  - 우수한 기술력과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 (일명 ‘Green Race’)이 심화되고 있음
  - 많은 국가들이 자국 녹색산업 육성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조금,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도입, 확대 중에 있음
- 이러한 녹색산업 지원 정책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‘녹색보호주의’ 확산에 대한 우려도 증가
  - 환경보호라는 명분 아래 외국 기업의 자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적 조치의 도입이 증가 추세
    -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보조금 등 정부의 지원정책 및 자국산 설비 제품 의무 사용 조치(Local Content Requirement) 사용 증가
- 최근 들어 녹색산업 관련 보호무역조치의 증가로 국가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
  -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우 녹색에너지 부문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을 두고 계속적으로 신경전을 펼치고 있음
    - 미국의 경우 녹색에너지 관련 중국의 지원정책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, 지난 12월에는 풍력 터빈에 대한 보조금 문제로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 등 강도높게 대응하고 있음
    - 중국 역시 상무부를 통해 미국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 불공정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는 WTO 규정을 위배하고 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 발표 (2012.5)

## II. 녹색에너지 상품 · 서비스 무역자유화 논의 동향

### □ 녹색보호주의 확산 방지 및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친화적 상품·서비스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 논의 진행 중

- 환경친화적 상품 · 서비스 (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, EGSs)에 대한 무역자유화로 기술이전 촉진, 녹색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효과 기대
  - 세계은행 보고서(2007)에 따르면 주요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시 해당 상품 무역 약 7% 증가, 비관세 무역장벽 철폐를 포함한다면 약 13%의 교역 증가 효과 기대
- 세계무역기구 (World Trade Organization, WTO)의 경우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협상 (DDA)에서 EGSs 에 대한 관세·비관세 무역장벽 철폐를 주요 의제로 포함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음
  - EGSs의 정의에 대한 국가 간 입장 차이로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

### □ 한편, 동 논의의 활성화 및 단계적 접근으로 ‘녹색에너지 상품 · 서비스의 무역자유화’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히 진행

- 녹색에너지 상품 · 서비스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로 온실가스 감축 기대
  - UN 중심의 다자간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커지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모색
  - 또한, 개도국 등 많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요한 녹색에너지 관련 기술이전 및 상품 교역을 저해하는 무역장벽 철폐 요구

#### 녹색에너지 상품 및 서비스란?

녹색 · 청정에너지 관련 기술이 적용된 제품, 해당 에너지원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을 포함.

## □ 녹색에너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교역 자유화 논의는 다자간 협상의 부진에 따라 지역협력체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

- 2011년 11월 하와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담에서 환경상품 목록 작성 및 해당 상품 관세 인하에 대한 협력 합의
  - 2012년 APEC 회원국들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환경친화적 상품 목록을 작성할 계획
  - 목록에 포함된 상품에 대해 2015년 말까지 5% 관세상한선 도입 계획
  - 또한, 환경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을 왜곡하는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협력할 것에 합의

## □ 특히, 협정가입국 간의 자발적 무역자유화 이니셔티브인 'Sustainable Energy Trade Initiative (SETI)' 논의 부상

- 녹색에너지 상품 · 서비스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 및 시장의 확대가 목적
  - 2009년 다보스포럼에 처음 주장되어, 세계무역기구(WTO), 유엔기후변화협약(UNFCCC), 세계경제포럼(World Economic Forum), G20 등과 연계하여 논의 진행 중
  - 미국, EU 등 많은 국가들이 지지 및 관심 표명하였고 관련 거버넌스 및 체제 개발을 목표로 유수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연구 프로젝트 진행 중
- Vestas, GE 등 신 · 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도 논의에 적극 참여
  - 풍력, 태양광 등 신 · 재생에너지 글로벌 기업들은 자국 설비 제품 의무 사용 조치를 포함한 녹색에너지 확산 및 시장진입을 막는 무역장벽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녹색에너지 무역자유화에 대한 지지 입장 표명

### Ⅲ. 종합 및 시사점

- 녹색산업에 대한 자국 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호주의적 조치의 도입 증가는 무역의존도가 크고 에너지다소비 업종 중심인 우리나라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큼
- 최근의 EGSs - 특히 녹색에너지 상품 · 서비스에 대한 무역자유화 논의의 부상은 녹색 관련 사업 부문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게는 긍정적인 신호
  - 녹색에너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는 해당 제품의 가격 하락과 교역 확산을 촉진시키고, 해외 시장 진출 및 투자 확대의 기회
  - 동 논의에는 해당 에너지 생산 설비에 사용되는 부품 및 관련 서비스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산업군이 직간접적으로 수혜
- 또한 녹색 에너지 상품 · 서비스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로 선진국, 개도국 간의 친환경 기술이전이 확대되고 이를 통한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가능
- 녹색에너지 상품 · 서비스 무역자유화에 관한 국내외 논의 동향 파악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 정부 및 산업계의 전략적 대응을 통한 국익 확보 기반 마련 필요

김지선 (e-mail: jisunkim@posri.re.kr)

☞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, 작성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.